

새의자

장석철 양구군새마을지회장



장석철 양구군새마을지회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회원들의 단합과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회장은 양구출신으로 비봉초, 양구중, 춘천제일

고, 가톨릭관동대를 졸업하고 원주 육민관고 교사와 양구군체육회 이사를 역임했다. 현재 강원도건설협회 지역대표와 대경종합건설 대표로 활동중이다.

이재용

“일자리 해법은 SOC 투자 확대” 정부·국회 ‘예산수장’ 한목소리

金부총리 정부안 증액 발언 이어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도
“건설업 고용창출 효과 가장 커”
내년 SOC예산 확충 필요 시사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
위원장
특별인터뷰

» 6면

정부와 국회의 예산 수장들이 내년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확대를 한목소리로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당초 계획보다 SOC 예산을 늘리기로 한 가운데 다음달부터 본격화될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 증액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3면

1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건설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국회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SOC 예산 증액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을 총괄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내년도 SOC 예산을 올해 정부안보다 증액하겠다”고 한 데 이어 기재부를 소관부처로 둔 국회 기재위의 수장도 SOC 예산 증액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당초 기재부가 정부 부처별로 취

합한 내년도 SOC 예산 요구액은 16조9000억원이었다. 이에 내년도 정부의 SOC 예산안은 올해 정부안인 17조7000억원보다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최근 이어지는 고용 악화 등 경기 둔화로 SOC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정책을 전환한 상태다.

정부와 국회에서 SOC 예산의 확대 필요성이 연이어 나오는 이유는 현재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이를 해결할 대안이 건설이 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정 위원장은 “정부가 SOC 예산을 줄인 것은 국내 SOC 소득이 충분하니 관련 예산을 줄여 다른 분야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전제로 진행

돼왔다”면서 “서민의 가장 큰 복지는 일자리인데 어느 분야가 일자리가 많이 나오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예산을 확대할 구체적인 SOC 분야에 대해서는 국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강조한 생활 SOC 예산을 중심으로 늘릴 예정이지만 국가 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는 대형 프로젝트를 발굴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정 위원장은 “SOC 투자를 해야 한다고 정부와 청와대에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왔지만 지금은 정부의 예산 편성이 마무리 단계”라면서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국가 장래를 생각해서 메가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할 사업 용역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가 합리적인 이유로 예산 증액을 요구하면 정부도 수용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회 여야 지도부와 해당 상임위, 정부가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상반기 건설수주 71.4兆… 9.2% ‘뚝’

공공부문 부진 탓… 하반기 감소폭 더 커질 듯

상반기 국내 건설수주가 10% 가까이 쪼그라들었다. 하반기에는 감소 폭이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대한건설협회가 12일 발표한 국내 건설수주 동향 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은 총 71조4219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9.2%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수주액 160조3955억원의 44.5% 수준이다.

전체적으로 공공 수주가 부진했다. 상반기 공공부문 수주액은 17조243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7%나 줄었다. 공공토목(-21.6%)과 공공건축(-21.8%) 모두 20% 이상 감소했다.

민간부문(54조1783억원)에선 민간토목(11.4%)이 선방했지만, 민간건축(-7.5%)의 부진 탓에 전체적으로 4.4% 줄었다.

임성울 건설 조사통계팀장은 “공공에선 항만·공항, 조경을 빼고 대부분의 공종

에서 감소 폭이 컸다”면서 “상반기에 SOC 예산이 초과 집행됐지만 공공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하반기에는 감소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부문 역시 주택·부동산 규제와 더불어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하반기에 더욱 부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주택·건축지표는 이미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올 상반기 건축물 착공 면적(6390만 2000㎡)은 4.4% 늘어난 반면 선행지표인 건축허가 면적(8197만3000㎡)은 2.2% 줄었다. 상반기 주택 인허가 실적 역시 전국 24만9505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16.2% 감소했다.

한편, 지난 6월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은 12조552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4% 감소했다. 공공(-35.2%)과 민간(-0.5%), 토목(-19.9%)과 건축(-10.9%) 전 부문이 마이너스였다. 김태형기자

“SOC 물량가뭄 해소 기대… 적정공사비 병행돼야”

정부의 SOC(사회기반시설) 투자 기조가 ‘축소에서 확대’로 전환되면서 건설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당장은 지역 도서관, 체육관 등 소규모 사업 위주로 물량이 나오겠지만, 길게 보면 중·대형 사업 확대에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의 ‘생활 SOC 투자 확대’ 발언 이후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생활 SOC 1조원 이상 투자 △지역밀착형 SOC 7조원 이상 투자 △내년 SOC 예산안 증액 편성 등 SOC 투자확대 전략이 쏟아지고 있다.

공공투자 감소로 극심한 물량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는 반기는 분위기이다. 대형

31일 22개 건설단체는 서울 여의도에서 7000여명이 모인 첫 장외집회를 열고 “월급 발주 OUT, SOC 투자 확대”를 주장했다. 또 지난 4월 ‘인프라 투자 확대방안 모색 토론회’를 비롯해 수차례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탄원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국내 최초로 전국 단위의 인프라 수요를 조사, 모두 1244개, 총사업비 442조원 규모의 생활밀착형 지역 핵심사업을 발굴해 국회·지자체에 건의했다.

전문건설업계는 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대형사업보다는 생활 SOC가

‘SOC 패싱’에 성장·일자리소극 역풍… 건설투자 방안 쏟아져
“한달전엔 상상도 못했”… 업계 공공시장 정상화 노력도 주효

건설사 A사의 한 관계자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SOC 투자 기조 변화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중견건설사 B사의 한 임원은 “축소지향적인 SOC 정책을 전환했다는 것만으로도 반갑다”면서 “생활SOC로 시작해 본격적인 토목·건축 분야로 확대되면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토대가 만들어졌다는 것만으로도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내건 ‘생활SOC’가 과거 ‘SOC 패싱’ 기조의 출구전략 성격을 띠다는 분석도 나왔다.

B사 임원은 “경기 침체와 일자리 쇼크에 빠진 정부로서 선택지가 많지 않다”면서 “경제성장 기여도가 높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건설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의 끈질긴 노력이 주효했다는 평가도 있다.

대한건설협회회를 중심으로 지난 5월

다만, SOC 투자 확대와 적정 공사비 확보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건설 관계자는 “적정 공사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선 아무리 물량을 늘려봤자 건설사들의 적자만 키울 뿐”이라면서 “물량과 공사비를 함께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의견도 있다. 중견 건설사 C사 임원은 “생활 SOC는 SOC를 너무 좁게 본 개념”이라며 “이런 사업은 아무리 늘려봤자 건설업계의 체감지수를 끌어올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기존에 계획한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A사 관계자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B, C 노선처럼 국민의 생활편의도 높이고 건설사들의 물량 증가도 이끌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신규 사업 발굴만큼 중요하다”고 말했다.

SOC 투자 확대와 적정 공사비 확보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태형·권해석기자 kth@

국회로 가면 늘어나는 SOC예산… 올해도 증액?

정부안 이달말 국회 제출… 투자확대 공감대 속 증가할 가능성 높아

정부가 이달 말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증액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SOC 예산의 국회 심의 방향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국회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감액해 최종 예산으로 확정했지만 SOC 예산만큼은 매년 증액했다.

12월 <건설경제>가 최근 5년간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과 국회가 의결한 최종 예산안을 비교해본 결과, 국회는 매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감액해 최종 예산으로 의결하고 있다.

정부는 2014년 예산안을 357조7000억원으로 편성했지만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 예산 규모는 355조8000억원이다. 2015년에도 정부는 376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국회에서 제출했지만 정작 국회를 통과했을 때는 375조4000억원으로 줄었다. 2016년 정부 예산안(386조7000억원)도 국회(386조4000억원)에서 감액됐고, 정부가 400조7000억원으로 편성한 2017년

예산은 국회에서 400조5000억원으로 줄어 의결됐다.

올해 예산인 428조8339억원도 정부안보다 1375억원 줄어든 규모다.

반면 같은 기간 SOC 예산은 매년 정부안보다 증액돼 국회를 통과했다.

2014년 SOC 예산은 23조7000억원인데 이는 정부안(23조3000억원)보다 4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2015년 정부는 SOC 예산으로 24조4000억원을 편성했지만 국회에서 24조8000억원으로 늘었고, 2016년에도 정부가 마련한 SOC 예산(23조4000억원)보다 국회를 통과한 예산(23조7000억원)이 더 많았다.

정부는 2017년 SOC 예산으로 21조8000억원을 편성했지만 국회는 22조1000억원으로 증액해 통과시켰다.

올해도 SOC 증액 흐름은 지속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첫 예산인 올해 정부는 SOC 예산을 대폭 축소해 17조7000억원으로 마련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무려 1

조2000억원 늘어난 19조원으로 예산이 확정됐다.

국회가 해마다 SOC 예산을 정부안보다 확대하는 이유는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려는 의지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도로나 철도 등 SOC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예산확보 경쟁이 나서는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구 예산을 제대로 심의하지 않고 슬쩍 끼워넣는 이른바 ‘쪽지 예산’ 논란도 반복되고 있다.

올해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SOC 예산이 증액되는 현상이 반복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특히 올해는 정부도 SOC 예산 확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어떤 형태로든 SOC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정부도 SOC를 늘리려고 하고 있어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이재명 지사, 관급공사 조례 개정엔 ‘도의회 반발’

100억 미만 표준시장단가 적용… “업계 반대 등 논란 이는데 일방 추진”

이재명 경기지사가 100억원 미만 관급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히자 도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을 무시한 일방적 추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지사는 1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정부에 건의하기 전에 경기도 조례 조항부터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11조(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는 도 지사가 지역중소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지사는 “상위법인 행정안전부 예규에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가 아닌) ‘표준품셈’을 적용하게 되어 있다 보니 경기도 조례도 동일하게 제정

돼 있다”며 “행안부 예규도 함께 개정한다면 더욱 좋겠지만,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당장 시작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표준품셈은 재료비, 인건비, 기계 경비 등 부문별 공사 비용을 표준화한 것이다. 표준시장단가는 과거 수행된 공사(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에서 축적된 공정별 단가를 토대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산출한다.

이 지사는 “시장에서 900원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을 1000원 주고 살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누군가 불로소득을 얻으면 그건 모든 이들의 손실”이라며 “공공건설공사비 거품제거,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관계자는 “상위법 개정 없이 조례부터 고쳐서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게다가 이 지사가 언급한 조례 조항은 표준시

장단가 미적용의 예외로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표준품셈 적용보다 원가가 높게 산정되는 경우’와 ‘표준품셈 적용이 어려운 신기술·신공법·특허 등을 포함하는 경우’를 넣는 등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건설업계가 반대하는 등 논란이 이는 사안에 대해 도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조례 개정 계획을 밝히는 것은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특히 도의회가 지난 7~8일 표준시장단가 적용과 관련한 정부 건의방안 등에 대해 도에 자료요구를 했지만 아직 답변이 없다”고 덧붙였다.

건설업계에서는 “중소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돼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표준품셈을 적용한다”며 “이 지사가 표준시장단가 적용으로 관급공사 예산을 절감해 복지 등 공약사업에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건설업체를 다 죽이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